

2018년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8년 9월 20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 지 원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 사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신 호 순 부총재보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신 운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상 형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현 기 공보관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8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및 제64조에 의거 금융중개 지원대출제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동 개편방안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 대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근로자 3명 이상 요건과 창업 후 7년 이내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적격 세액공제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취급실적 인정배수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일부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이 복잡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제도개편의 효과 등을 파악하고 이를 다시 제도운영에 반영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 DB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생략)

나. 보고안건

<보고 제56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56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DSR 수준을 대출종류, 만기구조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요국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을 보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움직임이 상이한 것으로 보여 수도권 주택시장 분석 시 이들 매매가격 동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으로 구분하여 산출되는 매매가격지수가 없어 이를 일반화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복원력과 관련하여 미 연준 및 영란은행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국내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는 유익한 정보지만 상당한 시장충격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복원력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테스트 결과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아울러 거시변수에 기초한 스트레스 테스트 외에 대외충격이 국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주요 이슈의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수요와 여타 주요국의 대출 수요를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음.

일부 위원은 향후 정책대응 방안으로 DSR 이외에 다른 정책수단이 있는지 여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도 함께 고려하여 펀더멘털(fundamental) 차원에서 민간신용 증가 수준의 점진적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음으로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주택수급 상황 파악 시 재건축의 경우 멸실주택이 증가하지만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도 늘어나는 점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주택수급 상황 등 공급여건과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수요변화와의 관계를 유

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장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주택수급 시점간의 불일치가 있어 특정연도의 주택수급 비율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평균 주택수급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한 호주, 캐나다의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음으로 최근 자영업자 부채현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은 고소득, 고신용 차주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비은행금융기관 통계를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중 고소득 차주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정확한 상황 분석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별 DSR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비은행 통계 등 자영업자 대출 관련 자료를 확충하여 이들에 대한 대출건전성 평가의 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시의적절한 금융안정 이슈들에 대해 잘 분석해 주었다고 평가한 후,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2010년 이후 주택거주 목적의 실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공급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향후에는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음. 이 경우 공실인 주택이 상당부분 레버리지(leverage)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보도자료의 <참고 1>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거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도 OECD 국가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술한 이유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거시경제상황, 계량모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전망하였으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이를 보도자료에 명시하였다고 답변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자설명회 시 유의하여 커뮤니케이션하겠다고 첨언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동 대책이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자본유출입과 관련하여 다음주 FOMC 회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신흥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아직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금융 및 실물 부문에 미칠 충격에 대해 계속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현재 주택가격 데이터가 매주 지역별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함과 아울러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단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일부 위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이슈에 비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 보도자료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양한 금융안정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잘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 분석 시 유량(flow) 측면의 수급요인뿐만 아니라 주택보급률, 자가주택 소유율 등 저장(stock) 측면의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택수급 변화 등 금융안정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3) 심의결과

설명 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실적이 양호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도 개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과 대외지급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한 상황.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율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할 필요.

1.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가. 신용시장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증가속도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양호한 모습.

나. 자산시장

장기금리와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움직임.

다. 금융기관

은행은 순이자마진 확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수익성 및 자산건전

성이 꾸준히 개선.

비은행금융기관도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대체로 개선.

라. 자본유출입

외국인 증권자금은 2018.1~8월중 미·중 무역분쟁 확산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으로 주식자금이 유출되었으나 공공자금의 국내채권 매입 지속으로 전체 적으로 유입.

2. 금융시스템 복원력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자본적정성 등 관련 지표가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

다만 향후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여 자본확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는 순대외채권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외환보유액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단기외채비중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양호한 모습을 지속.

3. 금융안정지수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6년 3월 이후 주의단계를 계속 하회하고 있으나 금년 들어 상승세를 보이다가 7월 이후 주의단계에 근접.

이는 글로벌 무역분쟁, 자산시장 불안정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된 데 주로 기인.